



	실 장	재가문서요약전	
조정관			
 2.2 			
국무총리실			

□ '95 정부조직관리지침

-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 유지
 -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현수준 유지
 - 분야별 종합조직진단 실시로 합리적 조직관리 도모
 - 위원회 정비
- 부처별 기능과 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과단위 조직 편성의 자율권을 각 부처에 부여
- 세계화·지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방안 강구
- 정부기능의 전면 재조사로 지방이양사무 발굴·조치

총 무 처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720-4097 / FAX 736-4803

문서번호 조기12210 -

시행일자 1995. 1.

받 는 곳 (제 1 안)
 내부결재

취급		장 관	국 무 총 리
보존			
차 관	원석재	원석재	이흥구
국 장	김동국	기획관리실장	원석재
과 장	이흥	제도심의관	원석재
기안	김상인	조직1과장	원석재
		조직2과장	원석재
		제도1과장	원석재
			제도2과장
			협조

제 목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·시행 (국무총리 지시 제1995 - 1 호)

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'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(제 2 안)

받 는 곳 받는곳 참조

제 목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

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'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받 는 곳 가 (-03~04), 나 (01~18), 다 (01~18), 라 (01~05)

(제 3 안)

받 는 곳 받는곳 참조

제 목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

'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받 는 곳 가 (03~04)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국 무 총 리

총 무 처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720-4097 / FAX 736-4803

문서번호 조기12210 - 18

시행일자 1995. 1. 28.

받 는 곳 받는곳 참조
(행정안전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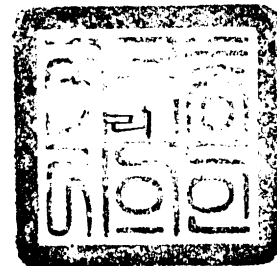
선결			지	
접	일자	'95. . .	시	
수	번호		결재·공람	
처 리 과				
담 당 자				

제 목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(국무총리지시 제1995-3호)

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'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'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국 무 총



받 는 곳 가(-03~04), 나(01~18), 다(01~18), 라(01~05)

1995년도

정 부 조 직 관 리 지 침

1995. 1

총 무 처

'95년도 정부조직관리 기본목표

- 1995년은 『세계화 추진 원년』으로
- 정부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를 위하여 '작고 능률적인 정부'를 구현함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,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
 - 첫째, 행정기구 및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한다.
 - 둘째, 정부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책임운영 체제를 강화한다.
 - 셋째,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.
 - 넷째,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 근본적인 지방정부 역량제고 방안을 강구한다.

차 례

- 1 기구·정원의 동결기조 유지
- 2 부처별 조직의 책임운영체제 확립
- 3 행정규제완화
-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민간위탁
- 5 행정사항

1 기구·정원의 동결기조 유지

- 신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『간소한 정부』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현수준 유지

가. 직제개정시 상계원칙의 철저한 적용

- (1) 각 부처는 세계화·지방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제를 개정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정원을 상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한다.

★ 행정부공무원 정원의 증감추이

구 분	'91.12	'93. 2	'93.12	'94.12
국가공무원	553,104	566,310	568,413	567,435
지방공무원	286,697	310,957	316,415	325,028

나. 기구·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

- (1)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(이하 직제통칙) 제9조의2에 의거 익년도 소요정원 심사와는 별도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의 제·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당해사업의 필요성과 기구·인력의 소요에 관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다. 정부조직진단 실시

- (1) 총무처장관은 직제통칙 제27조의2에 의거 정부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되, '95년도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관련 부처를 중점적으로 진단한다.
- (2) 조직진단은 자료수집 분석과 현지실사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지실사 진단은 6~7월중에 실시한다.
- (3)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을 보강, 감축, 현상유지 분야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연계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.

- *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최초 직제개정시 우선 반영토록 하고,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분야별로 합리적인 관리방향을 정립한다.

라. 위원회 정비

- (1) 1995년은 매2년 주기로 실시되는 『제8차 위원회 정비의 해』로서 '95년 이전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조속한 법령조치와 아울러 현행 위원회에 대한 전면 재조사·검토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
-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 → 폐지
- 기능이 유사·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→ 통·폐합
- 위원수가 과다하거나 고위직 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 → 축소 조정

마. 정부산하단체 관리

- (1) 각 부처는 『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』(조기01210-177, '92.9.7)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, 산하단체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.
- (2) 총무처는 정부산하단체 관리대상을 정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국한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하단체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.

2

부처별 조직의 책임운영체제 확립

- 행정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성 높은 정부조직 구축

가. 과단위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

- (1) 정부는 각부처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처별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처별 기능과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의 과단위 조직 개편시, 총무처장관의 직제개정안 제안권을 각부처 장관에게 위탁한다.
- (2) 총무처는 과단위 조직편성의 자율권을 각 부처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'95.3까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개정한다.

나. 탄력적 조직관리제도의 적극 활용

- (1) 각 부처는 행정수요 변동에 기구의 신설이나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대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, 일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새로운 업무의 발생시 직제통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간 정원의 상호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한다.
- (2) 또한, 각 부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통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.

다. 부처별 조직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정립

- (1) 각 부처는 생산성 높은 행정조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자율적 조직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- (2) 각 부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성·즉시성·자율성 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·위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.

- 세계화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행정규제의 근본적 정비와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생성 억제

가. 기존 규제사무의 전면 재검토·정비

- (1) 각 부처는 세계화·지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관 규제사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- (가) 국제규범에 부적합한 낡은 제도, 자율경쟁원칙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부적합한 경쟁제한적 규제등을 과감하게 폐지한다.
 - (나)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·허가등 규제 주체의 전환, 규제수준·방법의 변경 및 규제절차의 간소화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.

나.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

- (1) 모든 규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4조에 의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규제의 신설·강화시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절차를 준수한다.

* 세부내용은 『'95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』 기본지침('94.12.24) 참조

4

중앙권한의 지방이양

○ 집행적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 역량 보강

가. 대상사무 발굴

- (1) 재정경제원 등 15개부처와 내무부가 지정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중앙정부의 기능을 <별첨5, 사무구분 판단기준>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고,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.
- (2) 또한, 각 부처는 『중앙·지방사무총람』상의 국가사무중 지방이관 희망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.

나. 지방이양 확대기반 조성

- (1) 총무처는 지방이양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되, 『지방이양 합동심의회』의 심의를 거쳐 이양사무를 확정한다.

* 특히,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기능, 지방의 존립·지원 및 교육활성화 관련 기능,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시책적 분야를 검토대상으로 선정·발굴하되, 중점추진 분야별 지방이양대상 발굴 및 이양추진 사업은 연차적·단계적으로 실시한다.

- (2) 법제처는 국가사무·기관위임사무·자치단체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령규정형식을 강구하고, 각 부처는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이양조치(법령 개정) 시 법제처의 새로운 법령규정형식에 따른다.

다. 사전·사후관리체제 강화

- (1) 각 부처는 이미 시달된 "행정권한 위임·위탁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 지침" (국무총리지시 제11호 '91.7.9)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전·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- (2) 각부처(특히 재정경제원)는 국가보조 사업 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총무처와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3)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고,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한다.

5 행정사항

가. '96 소요정원 제출

- (1) '96년도 소요정원은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하여 심사할 계획이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'95. 4. 30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소요정원(안)을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.

나. 기구·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

- (1)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시에는 <별첨1,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 집행지침>을 참조하여 총무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기 바람.

다. 위원회 정비 및 실태조사

- (1) '95년 이전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<별첨2, 미정비위원회 현황>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, 각 부처는 '95. 6말까지 정비토록 하되,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 법개정시에 조치하기 바람.
- (2) 각 부처는,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<별첨3,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서>를 작성 '95. 3. 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.

라. 지방이관 및 민간위탁

(1) 지방이양분야

(가) 각 부처는, "지방이양합동심의회"에서 지방이양 추진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(별책, 『지방이양관련목록』 참조)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양된 사무는 그 내용을 총무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.

(나) 이양대상 부처는 소관사무에 대한 이양여부 검토결과를 <별첨4의 1.2호 서식>에 의거 작성 '95. 3. 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.

※ 지방이양 대상 부처

이양대상 부처(15개 부처)		기타 부처(20개 부처)	
분 야 별	부 처 명	분 야 별	부 처 명
지역산업 경제분야	재정경제원,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, 농림수산부 산림청, 수산청, 해운항만청	외교.국방	통일원, 외무부, 국방부 병무청
		국내질서	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
		정책조정. 지 원	총무처, 법제처 국가보훈처,
지역사회 문화분야	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교육부, 노동부, 문화 체육부, 공보처	재정.금융	국세청, 관세청
		사회간접 자 본	철도청
지방관리 분야	내무부, 조달청	고 도 의 전문기술	정보통신부, 과학기술처 통계청, 특허청, 공업진 흥청, 농촌진흥청, 기상청

(다) 내무부는 시·도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부처(15개)의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<별첨4의 1.2호서식>에 의거 작성토록 하여 '95.3.31 까지 총무처로 제출하기 바람.

*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등 중복된 이양희망사무 제외
(별책, 『지방이양관련목록』참고)

(라) 각 부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을 <별첨4의 3호서식>에 의거 작성 3월말 및 9월말에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.

(2) 지방위임 및 민간위탁분야

(가) 각부처는 '95년도중 위임·위탁추진대상 사무에 대하여 그 조치계획을 <별첨6의 서식>에 의거·작성 '95.3.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.

마. 협 조 사 항

(1) 각 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,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.

【 별첨 1 】

『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』 집행지침

1. 제도의 목적

- 정부조직관리의 장기예측을 가능하게 하고,
-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.

2. 근 거

-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9조의2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법령의 제정·개정, 청사의 신·개축 또는 시설·장비도입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총무처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.

3. 협의대상

- "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수반이 예상되는 사업"
 - 향후 직제개정이 필요한 『신규사업』 및 『계속사업』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한 청사개축이나 신축이전 등 기구신설이나 인력변동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제외함.
 - 계속사업의 경우 변동사항여부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역도 포함

4. 협의시기

-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서 제출시에 동시 제출

5. 협의시 제출서류

- 사업계획개요
 - ① 목적 ② 필요성 ③ 사업기간(준공예정일자등) ④소요예산(총사업비)
 - ⑤ 기타 관계부처협의여부, 자원조달방안등
- 예상되는 기구인력소요 및 인력활용계획
 - ① 기구인력소요의 필요성 및 그 규모
 - ② 소요제기 기구인력에 대한 설명자료
 - * 주요업무내용, 유사기구와 인력비교, 해당인력의 변화추이 등
 - ③ 기존 기구·인력의 활용계획
 - * 기관내 또는 기관간 유사중복 및 기능감소분야의 상계조정방안 등
 - ④ 기타 외국의 사례등 소요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
- ※ 첨부된 서식1에 의거 작성·제출

6. 행정사항

- 총무처는 각 부처로부터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의 필요성 및 기구·인력의 소요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
 -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경제원에도 통보
-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처의 해당년도 직제개정시 조치

< 서식 1 > 〇〇부 1996년도 신규사업 계획

1. 총괄표

사업명	사업기간	준공예정	소요기구	소요인력	비고
1. 〇〇지방청 신축공사	2년 ('94.3 - '96.3)	1996.6.30	〇〇지방청 (2국 5과)	총 35명 (4급1, 5급이하34)	
2. 〇〇사업소 신축공사					
계(건)				총 〇〇〇명 (2급 〇, 4급 〇 5급이하 〇〇)	

* 내역은 예시임.

2. 사업별 세부내용

가. 〇〇지방청 신축공사

(1) 사업계획 개요

(2) 예상되는 소요기구인력 및 인력활용 계획

나. 〇〇사업소 신축공사

【 별첨 2 】

미정비위원회 현황

* 총 31개 위원회

소관부처	위 원 회 명	근 거	정비구분	비 고
행정조정실	해양정책조정위원회	국무총리훈령	통 합	
재정경제원	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회	대통령훈령 법률 법률	폐 지 소속변경 폐 지	
총 무 처	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보수조정위원회	대통령령 법률	폐 지 폐 지	
내 무 부	도서개발심의위원회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지 원위원회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	법률 법률 법률 법률	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	
국 방 부	징발재산심의회	법률	폐 지	
교 육 부	과학교육심의회 중앙산업교육심의회	법률 법률	폐 지 폐 지	
농림수산부	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낙농심의회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농업정책심의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사료품질관리위원회	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	폐 지 폐 지 폐 지 직급조정 직급조정 직급조정	
통상산업부	염업심의회 광업개발심의회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	법률 법률 법률 법률	폐 지 폐 지 폐 지 소속변경	
정보통신부	전산망조정위원회	법률	소속변경	
보건복지부	노인복지대책위원회	법률	소속변경	
건설교통부	유로도로심의회 평화의담건설추진위원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	법률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법률	폐 지 폐 지 폐 지 소속변경 소속변경	
조 달 청	물품관리심의위원회	법률	폐 지	
산 립 청	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	법률	폐 지	

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서

① 위원회명						③ 근거법령			
③ 설치목적						④ 설치연월일			
⑤ 위원회 구성	위원장					부위원장			
	위원	위원 총수		공무원	교수	협회·단체 임직원	전문가	여성	기타
	간사	직위		직급		위원회 성격			
⑥ 위원회 기능									
⑦ 분과위원회 등	명칭			구성			기능		
⑧ 운영실적 ('93.1. - '94.12)	본 회의					분과 회의			
⑨ 예산집행내역	'93					'94			
⑩ 위원회 정비에 관한 의견									

【 별첨 4 】

지방이관 관련사무보고 작성 서식

< 서식 1 > 중기능 단위 국가·지방사무구분 총괄표

■ 총괄

부처명 :

(1) 중 기능 수			(2)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			비 고
국 가	지 방	계	①국가→ 지방사무	②위임→ 지방사무	계	

■ 중기능별 국가 / 지방 사무현황

(3) 국 가 사 무	(4) 지 방 사 무
계 :	계 :

※ 조사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로 문의하기 바람.

(전화 : 720 - 2062~3)

< 서식 1호 작성요령 >

- (1) 중기능 수 : 이양대상 부처(15개)의 중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사무로 판단하고, 그 결과를 국가/지방사무로 구분하여 중기능 수 기재
- ★ 서식2의 부처별 중기능 단위 [국가/지방사무 구분]란의 총계임
- (예 : 문화체육부 중기능 수 34개 중 국가기능 21개 및 지방기능 13개로 판단함)
- (2)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 : 이양대상 부처(15개)별로 국가 및 지방위임 사무에 대하여 서식2의 [의견조회]란에 이양을 희망한 단위사무(1로 표기)의 총계를 ①국가사무→지방사무로 이양희망한 경우와 ②지방위임사무→지방사무로 이양희망한 경우로 구분.기재
- ★ 현행 지방사무 및 별책 목록상 이양완료 및 확정사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기재가 없도록 할 것
- (3), (4) 중기능별 국가/지방 사무현황 : 중기능수 (1)번의 해당 중기능명 기재
(괄호안 숫자는 『중앙·지방사무 총람('94.1. 총무처)』상의 대·중기능의 고유번호임)

(예) ■ 총 괄

부 처 명 : 문화체육부

(1) 중 기능 수			(2)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			비 고
국 가	지 방	계	①국가→ 지방사무	②위임→ 지방사무	계	
21	13	34	35	57	92	

■ 중기능별 국가 / 지방사무 현황

(3) 국 가 사 무			(4) 지 방 사 무		
계 : 21			계 : 13		
1.	중기능명 기재	(1.1)	1.	중기능명 기재	(1.3)
2.		(1.2)	2.		(2.1)
3.		(2.1)	3.		(2.3)
⋮			⋮		
21		(5.1)	13		(4.1)

< 서식 2 > 이양대상부처 의견조회 서식

부 처 명 :

대기능명 :

중기능명 :

< 의견조회 >

사무구분 소기능	국 가 사 무		지방위임사무		지 방 사 무		관 계 법 령		(1) 의견조회
계									
(2) 종 합 (각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)	이양희망	위임희망	이양완료	이양확정	사무폐지	법령개.폐	기 타		

< 국가사무 / 지방사무 구분 [중기능 단위] >

(1) 사무구분표

구 분	중앙부처	지방자치단체	종 합
국가사무			
지방사무			

(2) 판단사유 :

< 관련예산 및 인력 내역 >

구 분	중 앙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
관련예산 지출 (단위 : 천원)	
관련 인력 (단위 : 명)	

< 지방이양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>

구 분	중 양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
① 예 산 란	
② 인 력 란	
③ 법적조치란	
④ 기 타 (행정.기술 지원 등)	

< 종합의견 >

< 서식 2호 작성요령 >

[의견조회 서식]

※ (1) 의견조회 및 (2) 종합란만 기재할 것(서식은 총무처 제공 예정)

(1) 의견조회 : 국가사무와 지방위임 사무에 한하여,

1(지방이양 희망), 2(지방위임 희망:국가사무만 해당), 3(이양완료), 4(이양확정)
5(사무폐지, 조항삭제), 6(법령개.폐), 7(기타:민간위탁.이양, 규제완화 등) 중
해당번호를 기재하고, 3,4,5,6은 확정일자를 (년.월.일)로 기재

* 3.4(이양완료, 확정)는 별책 「지방이양 목록」을 참고하여 작성(중복 배제)하고,
6(법령개.폐)은 관계 법령이 바뀐 경우 그 법령으로 수정하여 기재

- 1. 지방이양 희망 : 국가사무와 지방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고유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려는 사무
- 2. 지방위임 희망 : 국가사무를 현지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고자 하는 사무
- 3. 이양완료 : 법령상 처리권자가 시.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(시.도)로 개정된 사무
- 4. 이양확정 : 「지방이양 합동심의회」결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
- 5. 사무폐지 : 법령상 관련조항 삭제로 단위사무가 없어진 사무(민간이양 포함)
- 6. 법령개.폐 : 관련 법령의 개정.폐지.통합 등으로 근거법령이 바뀐 사무
- 7. 기 타 : 국가사무를 민간에 위탁.이양하고자 하는 사무,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무 등

(2) 종 합 : 중기능의 각 단위사무에 대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를
종합하여 기재

(예)

부 처 명 : 내 무 부

대기능명 : 4. 지방행정기획

중기능명 : 2. 지방공무원 인사제도

사무구분 소기능	국 가 사 무	지방위임사무	지 방 사 무	관 계 법 령	(1) 의견조회
소1. 임용권 행사	1.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			지방공무원법 제30조②	1

사무구분 소기능	국 가 사 무	지방위임사무	지 방 사 무	관 계 법 령	(1) 의견조회		
:	:	:	:	:	:		
소5. 인사운용 지도.감독	4. 인사보수 제도 관계법령 제. 개정			헌법 제95조			
	5. 조례규칙준칙 시달			지방공무원법 제81조	1		
	6. 인사행정 지도. 감독			지방공무원법 제81조	1		
	7. 인사교류 권고			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①	1		
	8. 특수학교 졸업자 특별임용 승인			지방공무원임 용령 제17조 ①4	1		
	9.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응시 배수 조정승인	1. 서울시만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㉑1호바목)		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5조 ②	1		
	10. 특별승진 임용 승인	2. 서울시만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㉑1호바목)		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8의4 ①2.4호	1		
	11.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	3. 서울시만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㉑1호가목)		지방공무원임 용령 제27조 제2항	4 ('94. 12.8)		
:	:	:	:	:	:		
소9. 지방공무 원 임용 후보자 장학제도 운영			32.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	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			
			33. 장학금 지급	지방공무원임 용후보자장학 규정 제6조 16호			
계	19	8	33				
(2) 중 합 (각부처 지방자치 단체 의견)	이양희망	위임희망	이양완료	이양확정	사무폐지	법령개.폐	기 타
	12			10			

[국가 / 지방사무 구분]

- 별첨5의 "사무구분 판단기준"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능 전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사무로 구분기재(해당란에 ◦표)하고, 그 사유를 약술
예) 중앙부처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기능을 지방사무로 판단한 경우

(1) 사무구분표

구 분	중앙부처	지방자치단체	종 합
국가사무			
지방사무	◦		

- (2) 판단사유 :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관리·운용 등은 지방자치제 실시 기반이 되는 자치행정권의 주요 내용이므로 지방 고유사무임

[관련예산 및 인력 내역(기준 : '95년도 사업)]

- 중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(총 지출규모) 및 인력(현원)을 아래 예를 참고.기재
(예)

구 분	중 앙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
관련예산 지출 (단위 : 천원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일반업무 추진비 : .</p> <p>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 : .</p> <p>* 관서운영비, 여비,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업무추진비에 포함 .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자체수입에 의한 지출 : 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└ (지방세, 세외수입 등)</p> <p>의존수입에 의한 지출 : 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└ (보조금, 지정분 교부세, 양여금, 국가지원 기금 등)</p> </div> </div>
관련 인력 (단위 : 명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◦ 총괄 : 개課, 개係, 총 ◦◦名 .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◦ 총괄 : 개課, 개係, 총 ◦◦名 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국가직 : ◦◦명, 지방직 : ◦◦명)</p> </div> </div>

[지방이양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]

※ [국가/지방사무 구분란]에서 당해 중기능을 지방사무로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

(예)

구 분	중 양 부 처 또는	지 방 자 치 단 체
① 예 산 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재 이양시 추가적 재정부담 규모 (단위:천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시 필요한 재정조치 추가지원 필요예산 기재(단위:천원)
② 인 력 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시 지방공무원 능력부족 내용 (구체적 예시) 추가 소요인력 기재 : 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업무처리 추가인력 및 능력확보 계획(구체적 기재) 추가 소요인력 기재 : 명
③ 법적조치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기재 (의견조회표상 근거법령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기재 (의견조회표상 근거법령 제외)
④ 기 타 (행정.기술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에 따른 교육.지침.정보제공 내용 등 기재 지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내용(구체적 기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양에 따른 교육.지침.정보제공 내용 등 기재 이양에 따라 필요한 기타 지원내용 (구체적 기재)

[종합의견]

※ 총무처 검토 공란임

(1) 소 기 능 명	(2) 대.중.소 기능고유번호		(* . .)	
(3) 단위사무명 (근거법령 : 이양일자)	· 단위사무명(근거법령 : 이양일자) ↳ 법령개정일자			
(4) 통보관련근거. 제목 : 이양사실 통보일	① 관련근거(문서번호) :			
	② 공문제목 :			
	③ 이양사실 통보일 :			
(5) 통보대상 자치단체	① 시.도 :		(총 개 기관)	
	① 시.군.구 :		(총 개 기관)	
(6)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내용				
(7) 소기능별 업무 수행능력 향상 을 위한 지도. 지원 사항	① 지침부여 (건)	② 교육실시	정 기 : 회] 총 회
	③ 인 력 (명)		수 시 : 회	
	④ 예 산 (천원)		⑤ 정보.기술제공 (건)	
(8)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	① 실시년월일 :			
	② 주 요 내 용 :			
	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:			
	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:			

(전화 : 720-2062~3)

< 서식 3호 작성요령 >

- (1) 소기능명 : 지방이양 관련 목록(별첨)상의 이양대상 사무가 포함된 소기능명을 기재
(예 :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)
- (2) 대.중.소기능 고유번호 : 당해 소기능의 「중앙·지방사무 총람」상 대.중.소기능
고유번호 기재(예 : *4.1.1)
- (3) 단위사무명 : 소기능별로 이양조치(법령개정)된 단위사무명을 기재하고, 사무별 근거
법령 및 이양일자를 ()안에 기재
(예)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(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②항: '94.2.10)
- (4) 통보관련 근거.제목.이양사실 통보일 : ①통보한 공문의 문서번호, ②공문의 제목
③주무부처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사실을 공문 또는 기타의 방법
으로 통보한 일자(예 : ○○년 ○월 ○일)를 기재
- (5) 통보대상 자치단체 : ①②번중 통보대상 자치단체 및 기관수를 기입
- (6)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 내용 : 주무부처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를
자치단체에 설정통보한 내용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제도.관행
등을 개선 (승인.보고폐지, 사후보고전환등)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
- (7) 소기능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.지원사항 :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, 소기능별로
①번부터 ⑤번까지의 사항을 기입한다.
(예) ①지침부여(2건), ②교육실시

정기 : 2회
수시 : 1회

 총 3회
③ 인력 (3명) ④예산 (1,000천원) ⑤정보.기술제공 (4건)
- (8)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
 - ① 실시년월일 : 실태를 직접 조사한 년월일자
 - ② 주요내용 : 실태확인.평가의 주요착안 사항
 -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: 사무처리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지식,
능력정도등 파악
 -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: 이양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개선요구사항 및
기능이양과 관련된 제반건의내용 기재

※ 1개 소기능상 단위사무의 근거법령이 2개·이상일 경우 : 근거법령 별로 서식 작성 요함

【 별첨 5 】

사무구분 판단기준

1. 적용 원칙

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을 단위사무, 소기능, 중기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.

가.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

- (1)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·조정하는 업무인가? (중앙)
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·편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가? (지방)
- (2) 사무처리 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? (중앙)
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? (지방)
- (3) 사무효력(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)이 전국적인가? (중앙)
사무효력(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)이 지역적인가? (지방)
- (4)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? (중앙)
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? (지방)
- (5)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(또는 장소적 근접성)이 적은가? (중앙)
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(또는 장소적 근접성)이 많은가? (지방)
- (6) 필요한 정보의 수집대상이 전국적인가? (중앙)
필요한 정보대상이 지역적 정보인가? (지방)

나. 경제적 효율성

- (1) 광역적·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·능률성제고 등 이익이 있는가? (중앙)

- (2)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? (중앙)
- (3)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가? (지방)
- (4) 지역적 실험의 필요성이 있는가? (지방)

다. 업무수행능력 (수용태세)

- (1)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.정보.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?
(중앙)
- (2)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한가? (지방)
- (3)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? (지방)
- (4) 사무이양시 예산.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? (중앙)
- (5)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.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? (지방)

라.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

- (1)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? (중앙)
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? (지방)
- (2) 제3자적 공정성이 필요한가? (중앙)
제3자적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? (지방)

마.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

- (1) 일반적인 기준.요건.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업무인가? (중앙)
- (2)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사무인가? (지방)

2.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예시

가. 지방자치단체사무(지방자치법 제9조)

기 준	사 무 예 시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 ◦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폐 및 그 운영·관리 ◦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◦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 ◦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 ◦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◦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◦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◦ 공유재산관리 ◦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◦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◦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◦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◦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자·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◦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 ◦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◦ 묘지·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 ◦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◦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 ◦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기 준	사 무 예 시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유지·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◦ 농림·축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◦ 농업자재의 관리 ◦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 ◦ 농외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 ◦ 농가부업의 장려 ◦ 공유림관리 ◦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◦ 가축전염병 예방 ◦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 ◦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◦ 중소기업의 육성 ◦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 ◦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4.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역개발사업 ◦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 ◦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◦ 지방도, 시·군도의 신설·개수 및 유지 ◦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◦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◦ 자연보호활동 ◦ 지방하천·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◦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◦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◦ 도립·군립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◦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◦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

기 준	사 무 예 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◦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유아원·유치원·국민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 ◦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◦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 ◦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 ◦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6.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 ◦ 화재예방 및 소방

나. 국가사무 예시(지방자치법 제11조)

- (1) 외교, 국방, 사법,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
- (2) 물가정책, 금융정책,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
- (3) 농림·축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- (4)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, 직할하천, 국유림, 국토종합개발계획, 지정항만, 고속국도·일반국도,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- (5) 근로기준,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
- (6) 우편,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- (7)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·시험·연구, 항공관리, 기상행정,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

【 별첨 6 】

'95 위임·위탁조치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

부 처 명 :

대상사무명	근거법령	위임·위탁유형	대상선정구분	조치계획

< 작성요령 >

1. 위임·위탁 유형란에는 지방위임(시·도, 시·도교육청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 등), 민간위탁(→○○공사, →○○협회 등)을 기재
2. 대상선정구분란에는 '95 신규선정, 행정쇄신과제 등을 기재
3. 조치계획란에는 「'95.○월중, 법개정후 시행령 개정」, 「'95.○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」, 「위임·위탁규정개정시 조치」 등으로 각 부처 조치계획을 시기·조치방법·선결사항 등과 함께 기재